참고 자료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2026. 4.

법무부

Contents

1 친부모가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살해한 **‘해든이’** 사건 4

2 ‘단순 스토킹’으로 덮일 뻔한 **‘계부의 의붓딸 성착취’** 사건 6

3 직장동료 3년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8

4 **‘인천판 도가니’**,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10

5 **JMS** 교주의 **여신도 상습 성폭행** 사건 12

6 세종시 **여중생 집단 강간·성학대** 사건 14

7 마을 주민들의 **여성 지적장애인 집단 강간** 사건 16

8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18

9 고교 후배 **‘성노예’** 사건 20

10 미성년자 강간죄로 **‘전자발찌 찬 채’ 지인 딸 성추행** 사건 22

11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한 강간 피해자의 한을 풀어준 사건 24

12 30대 학원 강사의 **미성년 여제자 추행** 사건 26

13 **성명불상 강간치상 범인을 특정**해 구속한 사건 28

14 지적장애 동급생 상대 **'엽기 폭력' 소년범** 사건 30

15 지적장애인 종업원 **'노예 노동'** 사건 32

16 **11살 아들에게 처와 성관계 강요**한 친부 친권상실 청구 사건 34

17 **'쓰레기집'에 자녀 방치·학대**한 친부 구속 사건 36

18 연인 앞에서 배를 칼로 그어 **자해 협박한 조폭** 사건 38

19 식당 주인의 **지적장애인 종업원 성착취** 사건 40

20 교제여성 **살인 전과 있는 스토킹범 구속** 사건 42

01

친부모가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살해한 '해든이' 사건

순천지청

생후 4개월된 아기 '해든이'를 친부모가 무차별 폭행 후 욕조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해든이의 집 홈캠 녹화파일 4800여 개를 압수 후 파일에 담긴 '소리'까지 샅샅이 뒤져, 사고사로 묻힐 뻔한 친모의 고의적인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밝혀낸 사례

검찰은 2025년 12월, 생후 4개월된 해든이를 욕조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된 친모 A씨를 보완수사한 끝에 고의적인 폭행과 방치에 의한 '아동학대살해' 임을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

친모 A씨는 2025년 10월, 생후 4개월 된 해든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18분간 전신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 날 해든이의 집에 설치되어 있던 홈캠에는 친모 A씨가 "죽어! 제발 좀 죽어!"라고 소리치며 18분간 구타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침대에서 떨어진 상처'라고 주장했지만 의료진은 해든이의 몸에서 멍을 비롯해 23군데의 골절, 내부 출혈 등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공조하여, "아이를 키우는 집이니 홈캠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 진술보다 영상 확보가 우선이니 꼭 확보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친부모로부터 안방에 있던 홈캠 일부 영상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 부부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임의제출된 홈캠 녹화파일 외에 증거영상이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4800여 개의 녹화파일 전부'를 확보**하고, 경찰 단계에서 분석이 미비했던 **홈캠 녹화파일에 담긴 '소리'에도 초점**을 맞췄다. 영상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학대 정황이 소리로 녹음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

에 착안, 4800여개의 녹화파일을 검사와 수사관들이 밤낮으로 샅샅이 다시 살펴보았다. 그 결과, A씨의 고성, 해든이의 울음소리, 구타 소리 등 추가적인 학대정황을 확인했고 친부 B씨가 폭행을 방관하는 정황들도 잡아냈다. 여기에 대검 통합심리분석, 의료자문,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치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보완**했다.

2025년 12월,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살해죄로, B씨를 상습아동학대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했고, **제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되어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사고사로 묻힐 뻔한 영아 살해 사건의 전모를 다각도의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밝힌 사례이다.

02

'단순 스토킹'으로 덮일 뻔한 '계부의 의붓딸 성착취' 사건

서울서부지검

의붓딸에 대한 '단순 스토킹'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피의자가 의붓딸에게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점에 의구심을 품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의붓딸이 중학생이던 때부터 '약 20년간 이어져 온 계부의 성폭행과 임신, 낙태라는 끔찍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전모를 규명하여 계부를 엄벌에 처한 사례

계부의 의붓딸에 대한 단순 스토킹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성범죄 의심 정황을 포착해 보완수사한 끝에, 의붓딸이 중학생일 때부터 약 20년 동안 이어진 참혹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전모를 규명해 계부를 재판에 넘겼다.

피의자 A씨는 1993년 혼인한 배우자의 딸(의붓딸)인 피해자를 2004년부터 무려 7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여 2005년경(당시 피해자 15세) 임신 및 낙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게 하고, 2022년까지도 강간과 추행, 협박을 이어왔다. 당초 경찰은 2023년 10월, A씨가 의붓딸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물건을 배송한 '스토킹 범죄' 혐의만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다시 살펴보던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등 단순한 의붓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해, 전면 재수사했다.

먼저 의붓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설득해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숨겨왔던 충격적인 추가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와 면담을 통해 일기장과 주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한 휴대전화를 확보, **일기장 원본을 대검에 필적감정해 피해 진술을 보강**한 끝에, 스토킹 혐의 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중범죄를 밝혀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성폭력 범죄가 송치된 스토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으므로 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2025년 9월 「성폭력 범죄가 본래범죄(스토킹 범죄)의 피의자가 범한 동종·유사 범죄 또는 본래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지른 범죄로서 본래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죄로서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정 내에서 은밀히 벌어지고 가족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 호소를 하기 어려운 친족간 성폭력 사건에서, 검찰의 예리한 보완수사로 경찰의 1차 수사결과를 보충, 검증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과 동시에 피의자에 대한 중죄 선고를 이끌어내 피해자를 구제한 사례이다.

03

3년간 스토킹 끝 직장동료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서울중앙지검

피의자가 직장동료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 전날 밤 피해자의 직장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하기까지 약 한 달간의 동선, 범행 준비 및 실행 과정 등을 객관적 증거로 세밀하게 복원해 철저한 계획범행임을 입증, 무기징역을 이끌어 낸 사례

검찰의 보완수사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피의자는 피해자 주소지의 강수량까지 검색해 가며 약 한 달간 범행을 계획했다.

피의자는 2022년 8월 18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행으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2022년 9월 15일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22년 9월 14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지하철 신당역을 찾아가 여자화장실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약 3년에 걸쳐 수백 차례 연락을 시도하는 등 집요한 스토킹을 지속해 왔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즉시 전담팀을 꾸려 **구속 기간 내에 피의자가 부인하는 '계획적 범행'임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였다.

검찰은 **피의자의 행적을 상세히 복원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 자료(피해자 주소지 방범용 CCTV, 통화 및 데이터 통신내역, 계좌 및 카드 사용내역, 인터넷 검색기록, 이메일 등)를 확보한 후 철저히 분석**하여, 피의자가 **별건 결심 공판 직후 곧바로 신당역에 찾아가 자신이 직위해제된 상태임을 숨기고 피해자의 주소지, 근무정보 등을 알아낸 사실, 이후 피해자의 퇴근시간에 맞춰 수차례 주소지에 찾아가 숨어 있었으나 피해자를 마주치지 못한**

사실, 피해자의 주소지에 갈 당시 GPS 교란 어플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헤어캡, 장갑, 양면점퍼를 준비한 사실,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집중호우로 우산을 쓴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해 강수량을 집중 검색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아울러 실형 선고(구금)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판결 선고 전날인 2022년 9월 14일 피해자의 야간근무 출근시간에 맞춰 주소지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그때까지도 피해자를 마주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근무시간이 시작되자, 결국 피해자가 근무하던 신당역으로 찾아가 **범행한 구체적 경위와 동기까지 확인**하여, 이 사건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살인임을 규명**했다.

결국 검찰은 2022년 10월, 경찰이 송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에 더해 피의자가 보복살인 범행 준비 과정에서 저지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주거침입 등 여죄까지 규명하여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A씨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서울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여성 대상 살인 범행으로 큰 사회적 충격을 주었던 사건에서, 검찰의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치밀하게 계획된 보복살인의 전모를 밝힌 사례이다.

04

'인천판 도가니',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서울중앙지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폐쇄적 시설인 인천 '색동원' 내에서 60대 시설장이 여성 중증장애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행사해 온 사건에서, 검찰 보완수사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진술분석 등을 토대로 추가 강간 범행까지 밝혀내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해 정신적 후유증 치료 등을 지원한 사례

검찰은 2026년 3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중증장애인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시설장 6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보호자강간, 강간등상해) 및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2025년 7월경까지 생활 지도를 명목으로 장애인인 피해여성 3명을 강간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하거나, 드럼스틱으로 때리는 등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범행을 지속해 왔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의 협의 요청을 받아 여성·아동범죄 수사 전문 인력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대검에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피해자 직접 면담, 색동원 직원 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이어서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경찰과 협의하여 신속히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받아 청구하고,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에 검사가 직접 참석하여 구속 필요성을 PPT 발표자료와 함께 적극 소명**함으로써,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A씨가 범행을 시인하였음에도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진술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자 1명에 대한 추가적인 강간 범행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고, 피해자들이 범행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국범죄피해자 지원 중앙센터'에 의뢰하여 **정신과 치료, 언어·예술치료 등 치료지원과 함께 주거 이전비·긴급생계비·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피해자들이 중증장애인인데다가 시설의 폐쇄성 등으로 인해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사건을 검찰이 경찰의 요청으로 초동 수사에 적극 관여하면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한편 숨어 있던 추가 범행까지 밝혀내 엄벌하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 대해 치료, 생계지원까지 수행한 사례이다.

05

JMS 교주의 여신도 상습 성폭행 사건

대전지검

JMS 교주 정명석이 여신도 성폭행으로 징역 10년을 복역 후 출소한 직후부터 또 다른 여신도들을 상대로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정신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반복한 사건에서, 경찰은 교주 1명만을 송치하였으나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JMS 2인자 등 간부 8명이 교주의 범행 조력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신도 대상 성폭행을 조직적으로 돕고 은폐한 범행 전모를 규명하여 엄단한 사례

여신도들 성폭행으로 10년 징역형을 살고 나온 종교단체 JMS의 교주 정명석이 다시 외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데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의 적극적 협력과 이후의 보완수사가 큰 도움을 줬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일명 JMS 교주 정명석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여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성폭행한 준강간 혐의 등으로 10년 징역형을 마치고 2018년 2월 형기 종료로 풀려났다. 그는 성폭행 전과로 발목에 전자장치(전자 발찌)를 차고 있음에도 2018~2021년 홍콩 국적 A씨와 호주 국적 B씨 두 여신도를 여러 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 두 여신도는 2022년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정명석을 구속한 후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정명석 재구속을 위해선 종교적 세뇌로 의사불능상태를 만들어 성관계 및 성추행을 가했다는 준강간 혐의 소명이 핵심이라 보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긴밀한 수사 협력**에 나섰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2회에 걸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담당 경찰관과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범죄 사실 구성 및 공판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했다.

검찰은 **JMS 여신도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명석 담당 보호관찰관의 협조를 받아 법원에 '기독교복**

음선교회 여성 신도 및 해당 단체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과 일체의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신청해 2022년 4월 인용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 경찰 송치기록 및 이전에 확정된 성범죄 사건의 기록을 전면 재검토한 후 탈퇴 신도 등 30여명 조사, 월명동 수련원 및 세계선교본부 등 압수수색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내부 교리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교주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 **JMS 내부 조력자들에 의한 조직적인 성폭력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여 JMS 2인자 등 2명을 구속 기소, 나머지 간부 6명을 불구속 기소** 하였다.

검경의 긴밀한 수사 협력과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정명석은 202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JMS 2인자는 징역 7년, 나머지 간부 중 3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다(간부 2명은 성범죄를 인식했다고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

정명석이 종교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종교단체 내부에서 그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밀히 도운 암수범죄에 대하여,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정명석이 수많은 여신도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 할 수 있었던 범행 구조 및 조력자들의 실체를 규명해 엄단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06

세종시 여중생 집단 강간·성학대 사건

대전지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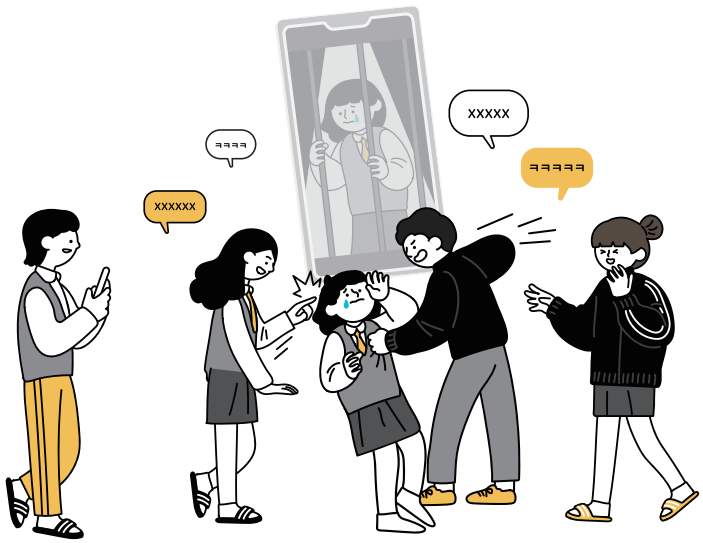
중학생인 가해자들이 또래 여중생을 집단 강간하고 이를 불법촬영해 신고하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두려움으로 인해 5년 후 신고하자 경찰이 피해자의 일부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주요 혐의를 불송치하였으나,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에서 진술 거부하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피의자들의 자백까지 얻어내는 등 진실을 밝혀, 주범 1명을 구속,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례

중학생 시절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해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남녀 일당 4명이 경찰의 솜방망이 수사로 처벌을 피할 뻔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018년 8월 당시 14세였던 A씨는 동성 친구의 사주를 받은 또래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A씨의 동성 친구 B씨는 이를 불법 촬영하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폭행까지 저질렀다. A씨는 힘겨운 후유증에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숨죽이고 살다가 5년 7개월 뒤인 2024년 2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0개월이나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의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오랜 시간이 지나 피해자 A씨의 기억이 일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주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4일 만에 경찰의 재수사를 요청한 데 이어 4개월간 직접 보완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자 이를 반박할 목격자 조사나 객관적 정황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 또 피해자 A씨의 기억이 정확하지 못한 점만 문제 삼을 뿐 피의자들의 과거 행적이나 교우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보호관찰 기록과 교도소 접견 기록 등 유관기관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자 10여명을 소환 조사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했던 핵심 목격자의 상세한 진술을 확보해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또 보호 **관찰소와 교도소의 협조를 받아 피의자들의 성향과 범죄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특수강간과 보복 협박 등 일부 피의자의 여죄도 밝혀냈다.

이와 함께 **피해자 A씨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해 진술권을 보장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 및 학자금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25년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주범 B씨(22세)를 구속 기소하고 B씨의 사주를 받아 함께 범행을 저지른 또래 남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 학대 범죄 발생 후 7년 만이었고 신고 접수 후 17개월 만이었다.

07

마을 주민들의 여성 지적장애인 집단 강간 사건

장흥지청

마을주민들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8세 아이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진 50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수년간 간음, 추행을 저질러 왔으나 피의자 중 CCTV에 찍혀 범행을 시인한 1명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7명은 불송치된 사안에서, 검찰 보완수사로 피해자 진술을 구체화하여 피의자 일부로부터 번의 자백을 이끌어 내는 등 충분한 증거를 보완, 공범 전원을 기소해 엄단한 사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오랫동안 성폭행 및 추행을 저지른 마을주민 7명이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왔다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50대 여성 피해자는 뇌혈관이 좁아지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말과 행동이 어눌해지면서 지능이 8세 아이 수준으로 떨어진 후천적 지적장애인이었다. A씨는 2022년 남편이 사망한 뒤 딸에게 2015년~2022년 같은 마을에 사는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털어놨고 딸은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 중 CCTV에 찍혀 범행을 시인한 1명만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송치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선 A씨 진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합의에 의한 관계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SNS, 동선, 생활 기록 등의 객관적 증거를 보강할 것을 재수사 요청 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였고, A씨 가족과 법률대리인은 수사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의신청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검찰은 **대검에 요청해 지적장애인의 진술방식과 기억 재현의 한계를 고려한 전문가 면담을 피해자 거주지에서 가까운 검찰청에서 5차례 실시해 피해 시기, 장소, 피의자별 사실관계에서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피의자 전원을 소환 조사해 일부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을 얻어냈다.

결국 검찰은 2024년 2월 1일 마을 주민 7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2025년 이 중 1명에 대해서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판결하고 재판 진행 중 사망한 2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각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지적장애인 맞춤형 진술청취와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 또 나이나 지위 외에도 SNS 접촉빈도 등으로 인해 성추행 및 성폭행에 항거하기 힘든 사정을 수집하고 제시하여, 자칫 묻힐 뻔한 추악한 범행을 규명한 사례이다.

08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부산지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되고 성범죄는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되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대검에 피해자 착용 바지에 대한 DNA 정밀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바지 안쪽에서 피고인의 DNA를 다수 검출해 성폭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변경하고 1심보다 대폭 상향된 선고형을 이끌어내 엄벌에 처한 사례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살인미수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노린 범죄였다는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다.

20대 여성 A씨는 2022년 5월 22일 새벽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A씨를 뒤따라온 30대 전직 경호업체 직원 B씨는 돌려차기로 A씨의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쓰러뜨린 뒤 발로 무자비하게 밟아, 의식을 잃은 A씨를 끌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성폭력을 시도한 뒤 도주했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뇌진탕과 외상성 뇌출혈 및 영구 장애가 우려되는 우측 발목 부상을 입었다. 또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로 사건 발생 후 입원 까지 2~3일간의 기억을 상실했다. 경찰은 사흘 뒤 B씨를 긴급체포하고 6월 살인미수 및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이 의뢰한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 A씨 청바지 바깥쪽 엉덩이 부분에서만 피고인의 Y염색체 유전자형이 검출돼 성폭력 혐의 입증이 어려웠기에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2022년 10월, 징역 12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B씨의 성폭력 범행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첫째 **A씨가 사건 당시 착용한 의류 4점(청바지, 팬티, 상의, 가디건)의 총 121개 부위에서 DNA 샘플을 채취해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실에 DNA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청바지 **안쪽의 허리, 허벅지, 종아리 부분, 청바지 바깥쪽 허리 부분, 가디건 1곳 등 총 5곳에서 B씨의 Y염색체 DNA가 발견**됐다. 이들 부위는 B씨가 A씨의 바지를 벗겨 내거나 원래대로 수습할 때 접촉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됐다.

검찰은 또 **성폭행 혐의 관련 3가지 증언을 확보**했다. **"A씨의 청바지 버클과 지퍼가 열려 골반 부위까지 내려가 있었는데 속옷은 보이지 않았다"는 최초 목격자의 진술과 "바지가 열려 양쪽 끝단이 '세모' 형태로 접힌 상태였다"는 경찰관의 진술, "응급실에서 환자복으로 갈아입힐 때 다리 한쪽에 속옷이 걸쳐진 것을 발견하였다"는 A씨 언니의 증언**이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B씨가 성폭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타격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에서 옷을 벗기다가 발각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하자 서둘러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강간살인미수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B씨에게 징역 2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20년 부착의 중형을 선고했고,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강간살인미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공판 단계에서 정밀 재감정으로 밝혀내 사회적 공분을 자아낸 여성 대상 강력범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사례이다.

09

고교 후배 성노예 사건

홍성지청

고교 女후배를 채무관계로 협박해 "몸으로 갚으라"며 2년간 39회 강간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등 성노예로 삼은 사건을 경찰이 증거부족으로 불송치하였으나, 검찰의 재수사요청과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소변을 먹이거나 쓰리섬을 요구하는 등의 엽기적인 강요 범행까지 밝혀내 구속 기소하고,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성관계 영상 삭제 등으로 2차 피해를 막은 사례

고등학교 2년 후배인 여성을 상대로 채무를 빌미로 성노예화했던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망을 피했다가 검찰 보완수사에 걸려 징역형을 살게 됐다.

20대 남성인 A씨는 2021년 8월~2023년 3월 고교 후배인 여성 B씨를 39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 B씨가 채무를 청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으로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강요했다. B씨가 채무를 갚고 관계를 청산하려 하자, A씨는 피해자에게서 2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했다. 또 A씨의 소변을 삼키게 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제3자와 동시 성관계를 갖는 쓰리섬을 강요하는 등 가학적 요구를 멈추지 않았다.

B씨는 결국 2023년 3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 A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물리적 힘을 사용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 40일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역에서 협박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것과 A씨가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여러모로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검찰은 영상에 대해서 즉시 삭제조치를 요구**했다. 또 **대화내역 중 협박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재수사와 피해자 진술 재분석과 정신과 진료기록 확보**를 요청한 결과, 협박에 의한 성폭력이 확인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이후 피의자를 2회 직접 조사하고 피해자 심층 면담을 통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두 사람 간에 오간 대화 내역 전체를 복원해 추가 범행을 인지하였다. **성폭행과 성관계 영상 촬영 외에도 소변을 마시게 하고, 쓰리섬을 요구하는 등 A씨가 추가 범행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또 **B씨의 정신감정을 통해 적응장애 진단기록과 심리적 고통 및 경제적 어려움까지 확인해 법원에 제출할 양형자료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24년 1월 구속 상태에 있던 A씨를 강간치상, 강요, 공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그해 6월 1심에서 징역 5년, 8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11월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10

미성년자 강간죄로 전자발찌 찬 채 지인 딸 성추행 사건

충주지청

미성년자 강간 전과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중에 지인의 10세 딸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저지른 중대한 사안이 불구속 송치되자, 검찰 보완수사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명확히 하고, 딸의 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인을 아내와 짜고 강간 등으로 무고한 여죄까지 규명하여 신속히 구속한 사례

검찰이 미성년자 강간 전과로 전자장치 부착 중인 상태에서 지인인 B씨의 딸, 10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피의자 A씨에 대하여, 신속한 보완수사를 거쳐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하였다. 또한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공모하여, B씨를 강간 등 혐의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하였다.

검찰은 A씨가 2024년 4월부터 5월경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지인 B씨의 주거지 마당에서 식사하던 중 B의 딸인 10세 여아의 가슴,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을 불구속으로 넘겨받아 수사기록을 검토해 본바, **A씨가 이미 미성년자 강간 전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0년에 출소한 상태로, 2030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B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해 불송치 결정이 난 이력을 발견해 수상히 여기고, 보완수사 과정에서 **B씨 등 다수의 참고인을 조사하고, A씨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700여 개의 통화녹음 파일을 복구하여 전부 분석**한 끝에, **A씨가 B씨의 고소 이후 자신의 배우자를 시켜 'B씨가 아내를 3차례 강간하였다', '200만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고한 사실까지 밝혀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 딸을 강제추행한 후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B씨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내는 돈을 빌려주지 않은 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 등도 확인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서 송치 사건 및 관련 불송치 사건의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고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아동 대상 성범죄 사범의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성범죄 뿐만 아니라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관련 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까지 규명한 사례이다.

11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한 성폭행 피해자의 한을 풀어준 사건

대전지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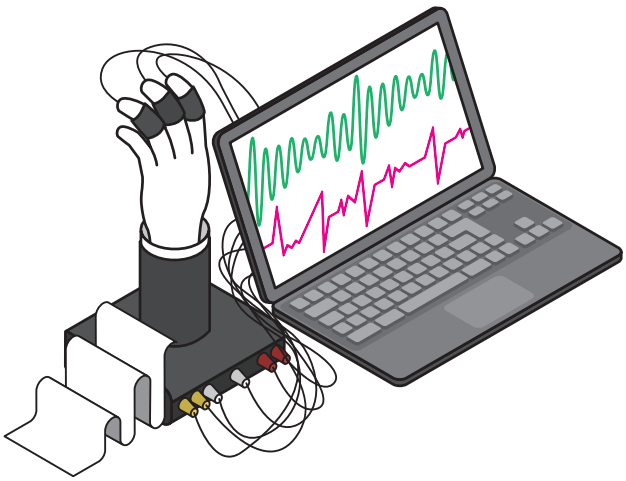
직장상사인 4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이 경찰에서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이를 비관하여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고소대리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맹점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증거를 다수 확보해 가해자를 기소하고 징역 8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냄으로써,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자 죽음으로써 억울함을 호소한 20대 여성의 한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풀렸다.

피해자 A씨는 2023년 6월 직장 상사인 40대 남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그의 차량과 집에서 원하지 않는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사건 직후부터 주변에 이런 사실을 알렸으나 약 2년이 지나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합의 하에 관계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그해 1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닷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해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추가 진술 확보가 불가능해져 사건은 그대로 종결될 위기에 처했지만, **유족의 요청으로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심리생리검사 기록을 살펴보다 핵심 쟁점이 아닌 질문들과 주관적 용어가 사용된 것을 발견**했다. 이를 토대로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해당 검사 결과로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검찰은 **A씨와 B씨의 직장에서 실시한 감사자료, 성폭력 상담기록 등 중요 증거들을 보완수사로 확보해 A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A씨의 직장동료이자 전 남친인 C씨로부터 **A씨가 사건 직후부터 피해 상황을 털어놓은 반면 B씨는 사내에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결국 검찰은 2024년 3월 B씨를 성폭행 혐의로 직접 구속하여 기소했고, B씨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되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

고소 당사자인 피해자 사후에도 과학적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규명할 수 있음을 밝힌 동시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의존한 경찰 수사의 한계를 드러내 검찰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뒷받침한 사례이다.

12

30대 학원 강사의 미성년 여제자 추행 사건

서울남부지검

17세의 아동·청소년인 제자를 상대로 위력 추행을 일삼은 학원 강사에 대해, 검찰 보완수사로 피의자가 미성년자의제추행죄 적용을 피하고자 피해학생의 17세 생일 직후 범행을 개시한 사실 등 계획적 범행임을 입증하는 한편 고소 취소 회유 등 증거인멸 시도를 밝혀내, 초범인 피의자를 직구속 후 기소한 사례

학원강사로 일할 때 만난 제자인 17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성기를 만지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헤어질 것을 통보받자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학교 앞에서 알리겠다', '자살하겠다'라고 말해 협박한 3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구속 기소 되었다.

경찰은 A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고의로 은닉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은닉 정황에 주목하여 휴대전화 및 범죄 관련 전자정보 확보를 위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방대한 양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과 녹취록을 철저히 분석해 피의자가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미성년자의제추행죄의 적용을 피하고자 피해자가 만 17세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생일 직후 범행을 개시하는 등 철저히 계획적인 범행임을 규명**하였다.

검찰은 **고소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차단하기 위하여 A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초범이고 안정된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피하려 하였으나,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주임검사가 직접 참여하여, A씨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사와 거주하면서 본건 범행을 하였고, 고소**

이후 피해자가 이사한 지역까지 피의자가 파악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점, 학원강사로 계속 근무하면서 범행 당시 피해자와 같은 나이의 미성년자 학생들과 접촉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큰 점 등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심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고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였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심문기일에서 '피해자의 친구들 중에 과거 피의자의 제자였던 친구들이 많으므로,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지거나 그 친구들을 이용해 피해자를 비난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등 2차 가해가 매우 염려되는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다.

결국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찰은 2026년 2월 A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협박으로 구속 기소하였다.

여성이자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이후 회유 시도와 협박을 신속한 구속수사로 차단하는 등 검사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13

성명불상 강간치상 범인을 특정해 구속한 사건

대구서부지청

경찰이 피의자 특정조차 하지 않고 수사를 중지한 강간치상 사건을 검찰에서 시정조치 요구하여 베트남인인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불법체류 상태임에도 경찰 조사 후 석방된 피의자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종용한 사실 등을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내 직구속 후 기소한 사례

성명불상을 이유로 수사가 중지되었던 강간치상 사건이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및 송치 후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다.

베트남 국적의 피의자 A씨는 2024년 11월 6일 새벽, 농업 아르바이트를 통해 알게 된 베트남 국적 유학생 B씨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폭행하려 했다. A씨는 자고 있던 B씨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뒤 성기를 삽입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초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성명불상'으로 수사중지 기록을 송부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B씨가 피의자 인적사항을 지목하고 있고 과거 약식명령 기록 등을 통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충분히 특정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신내역 분석 및 체포영장 신청을 통한 신병 확보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으나, A씨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지 10년 이상 지나 불법체류 상태임을 확인하고도 "구금되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석방하였다. 게다가 강간치상이 아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전처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주변 동료들을 동원해 허위 확인서를 만들거나 절도죄로 역고소하겠다" 라는 등으로 고소 취하를 압박한 사실**을 밝혀냈고, **A씨가 제출한 지인들의 'A씨, B씨가 연인관계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이러한 위협 속에서 작성된 것임을 확인**했다.

결국 검찰은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여 직접 구속하고, 피해자 조사를 거쳐 A씨를 강간치상으로 기소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압박·회유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14

지적장애 동급생 상대 '엽기 폭력' 소년범 구속 사건

대구지검

학교폭력으로 자퇴했다가 복학한 고교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동급생에게 침을 뱉은 우유나 소변을 마시게 하고 자위행위를 강요하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폭력 범행을 지속한 사건에서,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사건무마를 요구하며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실을 확인, 송치 직후 직구속함으로써 피해자와 신속히 격리한 사례

기숙사 학교에서 동급생을 가학적, 지속적으로 괴롭힌 학교폭력 사범이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었으나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 기소되었다.

18세인 피의자 A씨는 2024년 3월 대구 소재 기숙학교인 甲고등학교 재학 중 청소년성보호법위반 (강제추행), 강요 등 학교폭력을 저질러 자퇴 및 법원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후 2025년 3월 복학하였다.

복학 후에도 A씨는 학교 내에서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17세의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우유나 소변을 마시게 하고, 손등을 볼펜으로 찍는 등 자해하도록 강요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 스스로 성기를 보여주게 하거나 자위행위를 강요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거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 협박하고 화장실 점검구에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하는 등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다.

검찰은 사건을 **불구속으로 송치받아, 피해자 진술을 청취한 결과 피의자가 '선생님한테 말하면 죽여버린다'라고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교사의 112 신고로 사건화가 된 이후에도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한 사실과 함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종 **전력 및 본건 범행 수법, 피해자 및 목격자들과의 관계 등 고려할 때 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정황을 법원에 충분히 현출한 결과, 송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구속함으로써 피해자와 격리**한 사례이다.

15

지적장애인 종업원 '노예 노동' 사건

청주지검

편의점 주인인 피의자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한 '단순 사기'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검찰에서 보완수사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편의점 일을 시키고 월급을 지급하는 척 한 후 뒤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년 넘게 노동력까지 착취한 추가 범행을 밝혀내 함께 기소하는 한편,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병행한 사례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고용해 1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지급한 월급을 즉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년 넘게 무급 노동을 시켜 온 편의점 업주가 검찰의 집요한 보완수사 끝에 구속되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지적장애인 B씨의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편의점을 차려주겠다는 명목으로 B씨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고, B씨의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한편 B씨에게 월급을 송금한 직후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2천만 원에 이르는 급여까지 착취하며 1년 넘게 B씨를 노예처럼 부렸다.

경찰은 본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계좌거래내역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불구속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가 사용한 2개 계좌의 1년 치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편취금이 피의자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나아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편의점 일을 시키면서 월급을 빼돌린 사실까지 밝혀내, 피의자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부당한영리행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였다.

보완수사로 확보한 혐의와 증거를 더해, 검찰은 범행 부인과 출석불응으로 일관하던 A씨를 직접 구속하였고, 2026년 1월 사기 및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피의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와 협의해 민사소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병행하였다.

16

11살 아들에게 처와 성관계 강요한 친부 친권상실 청구 사건

김천지청

가족구성원 전원이 발달장애인인 가정에서 아내와 성관계 중 친아들을 불러 아내와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끔찍한 성적 학대와 폭력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에서 송치한 죄명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중죄를 적용할 증거를 확보하고,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상실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해 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실시한 사례

가족 구성원 전원이 발달장애인인 가정 내에서 아내와 성관계 중 친아들을 불러 성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파렴치한 부친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끝에 중죄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자녀 4명에 모두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공익대표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피해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피의자 A씨는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13세 아들과 9세 딸을 발로 차는 등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배우자 B씨를 폭행했다. 2024년 여름에는 B씨와 성관계 도중 당시 11세였던 친아들을 불러 B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천인공노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및 아동음행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1세의 아동으로 하여금 모친을 성폭행하게 한 사안의 심각성에 주목**했다. 검찰은 **아동음행강요 범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압도적인 위력이 개입된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여, A씨를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로 기소**했다.

* 아동복지법상 아동음행강요 법정형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또 보완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인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피해자 조사 시 가정폭력 보호시설장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팀장 등을 신뢰관계인 및 진술조력인으로 동석시키는 한편, 거주지가 먼 피해 아동을 위해 인근 지청 영상녹화실에서 대검 진술분석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기울였다.

특히, **A씨가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사정을 근거로, 범행 대상이 된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린 셋째와 넷째 딸을 포함한 자녀 4명 모두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8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가족에게 사법절차 지원, 주거 환경 정리, 심리치료 및 생계비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통해 공익 대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17

'쓰레기집'에 자녀 방치·학대한 친부 구속 사건

홍성지청

배우자와 이혼 후 개 오물, 벌레가 들끓는 쓰레기집에 두 자녀를 방치하고, 보호시설로 옮겨진 자녀들의 학교에까지 찾아가 위협한 친부를 검찰 보완수사로 직접 구속해 피해아동들에 대한 위해 우려를 신속히 차단하는 한편, 피해아동과 모친의 주거, 생계비 등을 지원한 사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녀들을 방치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친부가 피해아동보호명령조차 무시하며 가해를 지속했으나, 검찰의 직접 면담과 정밀한 보완수사 끝에 구속 기소되었다.

A씨는 2022년 11월 암 투병 중인 前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前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조건으로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졌으나, 그때부터 2025년까지 집안에 개 6마리의 배변과 음식물쓰레기 등 오물을 방치하고 바퀴벌레가 들끓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자녀들을 그대로 유기, 방임하였다. 또한 술에 취해 아들의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지속했다. 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도 멈추지 않았다.

사건을 불구속으로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청소년쉼터(보호시설)로 옮겨진 아이들에게 피 흘리는 개의 사체 사진을 전송하고,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피해아동들이 등교도 하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친권정지가 포함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 후 주임검사가 법원에 피해아동들과 동행하여 "아버지에게 절대 가기 싫고 어머니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피해아동들의 의사를 판사 앞에서 진술한 결과 청구가 인용**되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인용된 후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보호명령 준수를 다짐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그 후에도 끈질긴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자녀들에게 계속 접근하여 피해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쉼터 담당자를 경찰에 감금죄로 신고하며, 자녀들의 학교에 전화하여 폭언을 하거나 직접 학교까지 찾아가 위협한 사실 등을 밝혀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였다.

특히 **A씨가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병원 예약 문자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까지 잡아내 관련자료를 제출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025년 10월 구속 기소**하였다.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 아동들과 모친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쉼터 모색, 한부모 가정 지원 및 생계비 지원 등 실질적인 구호 조치**도 병행하였다.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송치 후 보완수사를 통해, 검사가 직접 피해 아동의 상태를 살피고 관계기관과 소통하면서 피해가 반복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규명하여 직접 구속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차단한 사례이다.

18

연인 앞에서 배를 칼로 그어 자해 협박한 조폭 사건

안동지청

연인 앞에서 칼로 배를 자해하며 협박하여 구속된 조폭이 지인들을 동원해 피해자의 피해 진술 번복을 시도하였으나, 검찰 보완수사로 DNA 감정결과 등 과학적·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회유 정황을 법원에 현출하여 피의자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시킨 사례

연인 앞에서 칼로 복부를 자해하며 협박하여 구속된 조직폭력배가 지인들을 동원해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며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으나, DNA 감정과 통신내역 확인 등 검찰의 신속한 보완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영주 지역 폭력 조직원인 피의자 A씨는 2025년 9월 20일, 연인관계인 피해자 B씨를 밀쳐 넘어뜨린 후 과도로 자신의 복부를 수차례 그어 자해하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했다.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자해한 사실이 없으며 복부 상처는 예전에 생긴 것"이라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구속 송치 이후 피해자가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검찰 조사에서도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을 번복**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된 상황에서, 검찰은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한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현장에서 압수되었던 칼을 대검에 감정의뢰하여 피의자의 DNA 정보와 대조**한 결과, 칼날에 묻어 있던 혈흔이 A씨의 것임을 밝혀냈다. 또한 **의료인 감정을 통해 A씨의 복부 상처가 최근에 발생한 자해흔임을 확인**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나아가 **A씨가 지인들과 유치장 접견 시 “피해자 진술을 번복시켜야 한다”라고 말한 기록을 확보**하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지인 및 변호인과 수십 차례 통화하며 회유당한 정황을 통신내역 분석으로 규명**했다. 검찰은 이러한 피의자의 증거인멸 정황을 법원에 제출하여 피의자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시켰다.

결국 검찰은 2025년 10월 구속기간 내 신속하게 수집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A씨를 특수협박죄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는 심리치료비 등 지원을 의뢰하여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취했다.

19

식당 주인의 지적장애인 종업원 성착취 사건

김천지청

지적장애인인 30대 종업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70대 식당 주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범행에 저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경찰이 불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피의자의 음성녹음에 기초해 피해 진술을 보다 구체화하고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전문 의견을 확보하는 등 보완수사하여 기소한 사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되었던 성폭력 사건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다. 중식당 업주가 중증 지적장애인인 종업원을 상대로 성추행과 유사강간을 저지른 사실이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과 피해자 진술 분석 등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밝혀진 사례다.

70세 식당 업주 A씨는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적장애인인 30대 종업원 B씨의 성기, 엉덩이를 만지는 등 총 16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했고, 잠든 B씨의 성기를 촬영하거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이어갔다. B씨가 이에 항의하자 뺨을 때리고, 증거가 담긴 B씨의 휴대전화를 수돗물에 적셔 망가뜨리기까지 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연령이나 체격에 비추어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근거와 달리 피해자가 범행을 시인하는 피의자의 음성녹음 파일을 이미 제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피해자 진술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전문 의견을 확보**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에 대하여 피해자 재조사를 통해 피해 진술을 더욱 구체화**했다.

검찰은 2025년 9월, 피의자 A씨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의자가 고용관계에 따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성적 유린한 범행의 실체가 경찰 불송치 결정으로 자칫 암장될 뻔하였으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단편적인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충실한 보완수사를 거쳐 실체를 규명한 사례이다.

20

교제여성 살인 전과 있는 스토킹범 구속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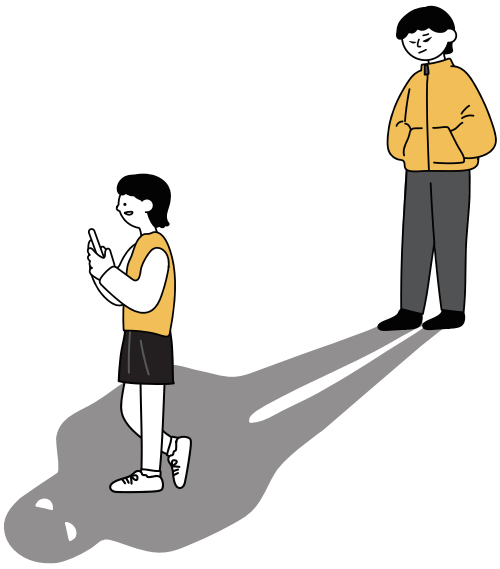
대구지검

교제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전과가 있는 피의자가 징역 10년을 복역 후 출소해 새로운 이성에게 스토킹 범행을 지속한 중대 사안이 불구속 송치되자, 검찰이 송치 직후 피해자를 면담해 피의자로부터 추가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 등을 확인하는 등 보완수사한 후 잠정조치 종료 전에 신속히 직구속하여, 강력범죄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를 보호한 사례

교제 중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피의자 A씨에 대하여, 2026년 2월 검찰 보완수사로 신속한 구속 수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였다.

A씨는 2006년 당시 교제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여 살인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는 자로, 이 사건 피해자와 교제 과정에서 수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전화 연결을 반복 시도하고, 주차금지 표지판을 피해자의 자동차에 던져 자동차를 손괴하는 등 폭력, 스토킹 범행을 지속해온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피해자는 잠정조치 4호에 따른 유치가 종료되어 A씨가 석방될 경우 또 자신을 찾아올까봐 두렵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호소**하였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잔혹한 범행 수법, 과거 살인 전력과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어, 추가 범행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유치 기간 만료 전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직접 청구, 발부받아 기소**하였다.

검찰의 보완수사 및 강제수사 권한이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시에 신속하게 행사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